

아베노믹스의 정책적 특징과 과제

-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인 ‘아베노믹스’는 재정정책, 금융정책과 같은 캄플주사 성격이 농후한 대중적인 요법과 규제완화와 같은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
 - 아베노믹스(금융완화+성장정책) → (디플레 탈출: 물가상승 → 기업의 수익 증가 및 임금 및 자산 가격 상승 → 소비증가)
 - 금융완화정책은 소비자와 기업이 디플레마인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금융완화 외에, 2%의 물가상승목표 설정이라는 일종의 인플레 타기팅(Inflation Targeting)을 통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 및 투자수요 진작을 겨냥하고 있음
-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재정압박, 스태그플레이션 발생, 대외적으로는 엔저가속에 따른 국제적인 통화전쟁 유발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 제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
 - 아베노믹스는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음

□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

- 아베노믹스는 새로운 아베정부의 성장 지향적인 재정 및 금융완화 정책임
 - 경제정책은 ①공급사이드(supply side)정책과 수요사이드(demand side)정책, ②내수 관련정책과 외수 관련정책 등 4가지로 분류
 - * 공급사이드는 기업, 수요사이드는 개인이나 가계를 각각 의미

-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공급사이드와 수출(외수)에 일정 부분 배려해왔던 자민당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수요사이드의 내수부문에 비중을 크게 두었음
- 그 결과 일본 주식시장의 주요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, 민주당 정권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내수의 수요사이드에 편향된 정권이라고 평가
- 이에 비하여, 아베노믹스는 민주당 정권의 반기업적인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친기업적인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임

□ 중점 분야는 환경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

- 일본의 산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, 향후 중점분야는 ①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 성장성이 높은 환경 분야, ②고용흡수력이 큰 의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26%에 불과, 따라서 고용흡수 측면에서는 의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를 성장시켜야만 되는 상황
- 성장전략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‘제조업 아니면 비제조업’, ‘수출(외수) 아니면 내수’ 등의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
- 제조업이나 수출(외수)은 효율성이 높고,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데 비하여, 서비스업이나 내수부문은 압도적인 고용흡수력이 있음
- 따라서 이들 양 산업의 특성을 준별한 후에, 쌍방향으로 산업의 날개를 펼쳐나가는 산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

□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

-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에 담대한 금융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
 - 즉,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통한 엔고 시정과 주가상승이 디플레이탈출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
 - 다이와종합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,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나 환율을 통해,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시사
 - 소비자물가의 분산요인을 분해해 보면, 환율이 물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
□ 아베노믹스의 2대 과제

- 아베노믹스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음
 - 첫째는 현시점에서 아베노믹스는 공공투자나 금융정책 등 긴급처방에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TPP참가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
 - 법인세 감세,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 감세,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일본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, 고주가엔저는 일과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
 - 둘째는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자민당은 ‘국토 강인화 계획’을 추진하기 위해 10년 동안 200조엔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실시할 방침임
 - 교량, 도로, 항만 등의 인프라는 통상 50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1960~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인프라가 2020년대에 본격적인 갱신 시기가 도래

- 일본의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20년채, 30년채 등 상환기간이 긴 채권가격이 크게 하락(장기금리 상승)하고 있음
 -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재정규율 상실을 경계하기 있기 때문임
- 재정규율의 상실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적극적인 금융완화는 사실상 머니타이제이션(monetization: 정부부채의 현금화)의 색채를 띠게 됨
 - 만약 일본에서 채권가격이 급락하게 되면, 악성 엔저나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됨
-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한편, 규제완화나 TPP 등 일본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과 더불어, 선별적인 공공투자에 의한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

□ 시사점

-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아베노믹스는 재정정책, 금융정책과 같은 캄플 주사 성격이 농후한 대중적인 요법과 규제완화와 같은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
 - 아베노믹스(금융완화+성장정책) → (디플레 탈출 : 물가상승 → 기업의 수익 증가 및 임금 및 자산 가격 상승 → 소비증가)
 - 그러나 아베노믹스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%의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일종의 인플레 타깃팅(Inflation Targeting)임

- 현재 일본의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융완화를 통한 ‘금리하락 → 총수요증대·물가상승’ 효과를 예상하는 일본의 소비자와 기업들은 디플레마인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통상적인 금융완화 외에 인플레 타깃팅을 통해서 물가상승, 장기실질금리 하락(명목금리의 상승폭을 물가상승폭 이내로 억제)에 대한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처방이 필요
- 이와 같은 기대효과가 나타나기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국내적으로도 부작용,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들이 적지 않음
- 대외적으로는 무제한 금융완화가 엔저 가속으로 이어져, 이로 인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들의 대응 즉, 통화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 제시도 만만치 않을 것임
- 일본의 금융완화가 엔저에 의한 수출확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, 중국, 독일, 신흥국들로부터의 반발과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
<참고자료>

- 다이와종합연구소, 『日本経済見通し:「アベノミクス」をどう捉えるか?』

安倍政権の成立の影響などを考慮し、経済見通しを暫定的に改訂: 日本経済 Monthly』 2013년 1월18일

http://www.dir.co.jp/research/report/japan/outlook/monthly/20130118_006694.html